

'불공정 공천' 성토장 된 민주당 의원총회

“사당화 공천 책임 물어야”

더불어민주당이 친문·비명계가 대거 포함된 현역 의원 하위 20% 통보와 비명계 의원들의 이름이 제외된 지역구 후보 적합도 여론조사 등으로 공천 내용이 격화하고 있는 가운데 21일 열린 의원총회에서 공천이 불공정하게 진행되고 있다는 문제 제기가 이어졌다.

하지만 비명계는 당초 지지를 하락과 공천 잡음 등을 문제 삼으며 이재명 대표의 2선 후퇴 등 거취와 관련해 책임론을 제기하는 방안도 검토했다가 일단 이를 유보했다.

민주당은 이날 국회 본회의 직후 의원총회를 열고 당내 공천 심사를 둘러싼 각종 논란에 대해 논의했다. 2시간 가량 이어진 의총에서는 15명의 의원이 자유 발언했다. 홍영표·송갑석·윤영찬·전해철·이인영·오영환 의원 등은 현역의원 평가와 후보자 적합도 조사 등 공천 과정이 불공정하게 이뤄지고 있다고 입을 모았다.

이들은 특히 현역 의원의 의정활동

비명계 하위 20% 통보·정체불명 여론조사 등 문제 제기

홍영표 “이재명 사당화 공천 진상 정확히 파악해야”

송갑석 “조국 때 맞았다… 공정성 의심 받으면 총선 어려워

이재명 불참… 정청래·김성환 등 지도부도 회의 도중 나가

평가가 어떤 원칙과 기준에 의해 이뤄졌는지, 또 주말 사이 실시된 비명계 현역 의원의 지역구를 겨냥한 정체불명의 여론조사가 어디에서 진행된 것인지 등을 규명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홍영표 의원은 기자들과 만나 “이재명 대표의 사당화를 위한 공천이 왜서는 안 되고 윤석열 정부에 대한 심판을 통해서 총선 승리하는 공천이 돼야 한다고 말했다”며 “정체불명의 여론조사와 국민들도 납득할 수 없는 (현역) 하위 20% 문제들에 대해 정확하게 진상을 파악하고 거기에 대해 책임도 묻고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의총에서는 윤 정부 심판하기 위해 모두 힘을 합하고, 통합을 통해 반드시 총선 승리해야 하는데 당 지도부가 상당히 상황을 잘못 바라보고 있다는 지적이 많았다”며 “그러다 보니 친문·비명을 제거하는 것에 골몰하고 있는 거 아니냐는 얘기도 있었다”고 지적했다.

송갑석 의원은 “과거 조국 전 장관 사퇴했을 때도 공정이 화두였다”며 “자칫 잘못하면 민주당 후보들은 공정한 과정을 거쳤는가 하는 의심 받게 되면 굉장히 힘들어진다”고 우려했다.

이어 “근본적으로 민주당이 총선을 이기려고 하는 의지가 있느냐에 대

해 당원과 국민들로부터 의구심을 받고 있다”며 “시간이 얼마 없다. 어떤 식으로든 이 문제를 해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재명 대표의 2선 후퇴와 비상대책위원회 전환 등의 요구도 있었다는 물음에는 “거기까지는 아니”라며 “최근에 일어난 당내 갈등과 분열로 이끄는 여론조사라 등의 문제에 대해 진상을 조사해서 책임을 지워야 한다는 이야기가 주었다”고 설명했다.

최혜영 원내대변인도 이에 대해 “이 대표의 2선 후퇴 이야기는 없었다”며 “거취에 대한 책임론은 아니었다. 공천 잡음에 대해 지도부가 어떻게 할 것인지, 책임 있는 답변을 해야 한다는 취지였다”고 말했다.

이날 의총은 이재명 대표 등 당 지도부에 대한 성토장이 됐지만 정작 이 대표를 참석하지 않았다. 정정채 최고위원과 인재영입위원회 간사인 김성환 의원 등 일부 지도부와 공천 관련 기구 책임자들은 의원들의 비

관이 이어지자 의총 중간에 회의장을 박차고 나가며 불편한 감정을 감추지 못했다.

의원들은 이 대표 불참에 불만을 토로했다. 한 재선 의원은 “이 대표 불참을 것을 두고 의원들이 불만을 많이 표시했다”며 “불참에 대한 설명도 별도로 없었다. 의도적으로 문제를 피하고 있는 것 아니냐”고 따져 물었다. 윤영찬 의원은 “오늘 할 말이 많은데 왜 안 나왔는지 모르겠다”며 “공개적으로 (불만을) 이야기했다”고 말했다.

홍영표 원내대표는 당내 공천 잡음에 “지도부로서 책임감을 느낀다”고 밝혔다.

홍 원내대표는 비공식 여론조사 논란이 재발하지 않도록 조치하고, 재심을 신청한 하위 20% 의원들에게는 공천관리위원장이 당사자에게 평가 결과를 설명하도록 요청하겠다고 말했다고 최 원내대변인은 덧붙였다.

/뉴시스

민주 두세훈 예비후보

“전공의 집단사직 철회하라”

더불어민주당 두세훈 예비후보(완주·진안·무주·장수)는 21일 전북특별자치도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국민의 생명권 보호를 위해 정부의 의대 정원 확대에 야기된 전공의의 집단사직을 철회할 것을 촉구했다.



또한, 정부가 붕괴된 필수의료, 지역의료, 공공의료에 부족한 의사수를 반영해 합리적 범위 내에서 점진적으로 의대 정원을 확대해 나갈 것을 촉구했다.

더불어 증원되는 의사들이 필수의료, 지역의료, 공공의료 분야로 배치될 수 있도록 지역의사제와 공공의대 도입도 촉구했다.

현재 정부는 의사부족을 이유로 연 2000명 이상 의대 정원 확대를 선언한 상태다.

두 예비후보는 “이미 국민들 절대 다수가 고령화 사회로 의료 수요 증가, 지역 의료 격차 해소, 공공의료기관 및 필수 의료 분야의 인력 확보 등을 이유로 의사 증원에 찬성한다”면서 “핵심은 지역의사제와 공공의대를 적극 도입해 증원되는 의사들을 붕괴된 필수의료, 지역의료, 공공의료 분야로 우선적으로 배치될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구체적으로 두 예비후보는 “정부와 국회는 필수·공공의료 위기를 해소하기 위한 법률적 근거 제정인 ‘국립공공보건의료대학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안’, ‘지역의사 양성을 위한 법률안’의 국회 통과에 서로 적극 협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별취재반

“구시대적 밀실 사천 안한다”

새미래, 공관위원장에 조기숙 이화여대 교수

정책위원장에 김만흠 한성대 석좌교수 임명

이낙연 전 국무총리의 제3차대 신당 새로운미래가 공천관리위원장에 조기숙 전 노무현 정부 청와대 홍보수석을 임명했다.

이낙연 새로운미래 공동대표는 21일 오전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책임위원회에 참석해 “공천관리위원장에 노무현 정부 홍보수석비서관으로 일했던 조기숙 이화여대 교수를 모시기로 했고, 정책위원장에 김만흠 현 한성대 석좌교수를 임명하기로 의견을 모았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신임 조기숙 공관위원장과 김만흠 정책위원장을 소개하며 “전권을 위임하겠다”고도 했다. 조 위원장은 “저는 한때 노무현 대통령에 참모였고 오랜 민주당의 지지자였다”고 자신을 소개했다. 이어 “제가 오늘 이 자리에 서게 된 건 지난해 5월에 출간한 ‘어떻게 민주당은 무너지는가’라는 책에서 제3차대 신당 창당을 제안했기 때문인 것 같다”며 “여기에 함께 해준 이낙연·김종민 두 공동대표의 가시발기에 동행이라도 해 드리는 것이 인간적 도리가 아닐까 생각해서 기꺼이 이 자리를 맡게 됐다”고 말했다.

공천기준에 대해서는 “오늘 원칙 세 가지만 말씀드리겠다”며 “첫째, 저는 물론 전권을 위임 받았지만 전권을 위

두르는 구시대적 밀실 사천은 하지 않겠다. 우리 국민이 원하는 건 더 좋은 민주주의”라고 강조했다. 또 “둘째, 김대중 대통령처럼 상인의 현실감과 서생의 문제의식으로 후보를 발굴하겠다”며 “이런 분들이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후보라 생각하기 때문이다. 또 공관 위원과 시민 당원 배심원단에 의한 상향식 공론과정을 통해 투명한 비례대표 명단을 만들 수 있도록 새로운 제도를 도입하겠다”고 설명했다.

조 위원장은 “셋째, 선진국에서 태어난 청년 정치인들이 청년의 문제의식을 가장 잘 이해하리라고 생각한다”며 “청년이 각자도생으로 문제를 해결하도록 내버려두지 않겠다. 청년에게 비례대표 문호를 개방해 그들이 국회에서 청년들의 삶을 지키도록 하겠다”고 부연했다.

김만흠 정책위원장은 “제가 당 정책위원장을 맡게 되어서 그런 게 아니라 정파적인 입장과 관련 없이 밖에서 활동하면서 칼럼을 써왔던 소명 그대로, 지금 양당 독과점 체제, 불합정치의 적대적 공생 상황을 극복해서 한국 정치를 좀 건강하고 포용의 정치, 상생의 정치를 되돌릴 수 있는 역할을 하는 게 새로운미래에 주어졌다고 본다”고 했다.

/뉴시스

“진안 은천지구 배수개선 국비 70억 확보”

민주 안호영 의원

3선에 도전하는 더불어민주당 안호영 국회의원(완주·진안·무주·장수)은 21일 “진안군 은천지구가 2024년 농림부 배수개선사업 기본조사 대상지구로 선정돼 국비 70억원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배수개선 사업은 지대가 낮거나 하천변에 위치해 상습적으로 침수피해가 발생하는 농경지에 배수장과 배수문을 설치하고 배수로를 정비하는 사업이다. 사업 위치는 진안군 진안읍 가림리와 마령면 평지리 일원의 하천(은천천, 지방하천)이 포함될 예정이다. 진안읍과 마령면은 오래전 설치된 배수로가 수량을 소화하지 못하고, 하천으로부터 역류까지 발생해 매년 농경지 침수피해가 반복되고 있었다. 농민들은 농작물 침수 및 재해 우려 등 민원을 지속적으로 제기했지만 해결되지 않아 고통을 호소해 왔다.



“진안을 가림리와 마령면 평지리 일대는 기존 배수시설 통수능력이 부족해 상습적인 침수가 발생해 농민들이 고통을 겪어왔다”며 “이번에 확보된 국비로 기존 배수시설을 정비하면 농경지 침수 피해가 발생하지 않아 진안군 농민들이 안전하게 영농활동을 할 수 있게 될 것이다”고 말했다.

한편, 안호영 의원은 진안군 은천지구 배수개선 사업 이외에도 대규모 배수개선사업으로 연장지구에 국비 58억원, 대량지구에 52억원의 예산을 확보 한 바 있다.

/진안=우태만 기자



의료계 집단행동 관련 관계부처 합동 브리핑

박상재 법무부 장관(사진 오른쪽)이 21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의료계 집단행동 관련 관계부처 합동브리핑을 하고 있다.

“국도 19호선 안성~적상 4차로 확장 신속 해결 약속”

민주 정희균 예비후보, 무주지역 10대 공약 발표

더불어민주당 정희균 예비후보(완주·진안·무주·장수)가 21일 무주군청 기자실을 찾아 ‘무주군 정책발표회’를 개최했다.

정 예비후보가 이날 내놓은 정책은 우선 무주·진안·장수 5대 공통공약으로 △무주·진안·장수 특례군 법제화 △동부산악권 노인치매안심센터 △거점형 공공산후조리원 △외국인 근로자 농촌 일자리 3종 세트 △산림관광특구 지정 등을 내놓았다.

무주군 10대 공약으로는 △태권사관학교설치 △국도19호선 안성~적상 4차로 확장 △철도·고속도로 등 광역교통망 연결 △관광산업 투자선도지구 지정 △마을주민의(안전한 보행권)과 관광객을 위한(경관보행도로) 조성 △농작물 재해보험 품목 및 농업작업 재해 보상 확대 및 보상을 인상 △스마트 양봉 허브 구축 등 총 10가지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먼저, 글로벌 태권도 인재양성기관의 주축이 될 국제태권도사관학교의 설립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국제태권도사관학교 설

치법’을 추진한다. 또 사람, 물류 등 지역 간 연결에 핵심 요소인 철도·고속도로 등 광역교통망 연결에 힘써 나갈 방침이다. 관련에 정 예비후보는 “무주·전주 고속도로, 전주·진안·무주·김천 동서횡단철도망 구축을 국가기반 교통망 계획(제3차 고속도로 건설계획)과 제5차 국가철도망 건설계획)에 반영해 동부내륙권의 개발을 앞당기고 차별 없는 지역균형발전을 이룩하겠다”고 말했다.

특히 8년 동안 무주군 자존심을 구긴 국도19호선 안성~적상 4차로 확장 신속 해결을 내걸었다. 정 예비후보는 “안성~적상 4차로 확

장 사업(추정 사업비 401억 원 L=4.0km, B=20.0m)은 덕유산관광단지

와 무주덕유산리조트를 연결하는 국도 19호선의 접근성을 개선하고 안전성까지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 안성면 금령리에서 적상면 사산리까지 구간”이라고 부연했다.

그러면서 “안성 우회도로(5.93km)와 적상~무주IC(7.52km) 구간은 지난 2010년 4차로로 확장됐으나 안성~적상 4km 구간은 아직도 교통사고 위험이 상존하는 2차로로서 도로확장이 시급한상황”이라며 “지역발전의 동력이 되는 모든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되게 하겠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지역특성상 농임업 종사자와 일반 노동자가 많아 이들의 노후 연금이 공무원연금과 3배 이상의 격차로 노후의 생활격차가 심각한 점을 꼬집으며 연금급 개정 등을 통해 이를 해소하겠다고도 했다.

이와 함께 구천동 관광특구 집단시설지구로 ‘관광산업 투자선도지구’로 업그레이드 해 무주군 성장거점으로 육성 계획도 더했다.

여기에 무주군 안성면 일원에 산악관광진흥지구를 조성해 무주군을 대한민국 대표 산림레포츠 1번지로 육성해 나갈 계획을 밝혔다.

이 외에도 △마을단위 LPG공급 배관망 구축 사업 확대 △사라지는 농촌, 마을소멸 방지(국도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및 도시·군관리계획수립 지침) △원스톱 제공 청년활력센터 설립 등을 공약했다.

/특별취재반



전북선관위, 총선 대비

사전투표장비 담당자 교육

전북특별자치도선거관리위원회(이하 전북선관위)는 제22대 국회의원선거 사전투표장비의 완벽한 준비를 위해 21일 15개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 사전투표담당직원을 대상으로 사전투표장비 교육 및 실습을 실시했다.

주요 교육내용은 사전투표 절차, 사전투표통신망과 통합명부시스템 운영 방법, 본인확인기·투표용지발급기 등 신규 장비 사용 및 장애처리 등이다. 특히, 사전투표관리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동명인 확인, 투표용지 오·훼손 재발급 등 처리, 사전투표록 기재사항, 회송용봉투 인계절차, 사전투표소 물품 등 사용·인계 방법 등을 중점 교육했다.

사전투표장비 1대는 국회의원선거 지역구 5인, 30개 정당 기준으로 관내 사전투표 900명, 관외사전투표 750명 정도의 투표용지를 발급할 수 있으며, 선거인 1인당 본인확인 및 발급에 소요되는 시간은 1분 30초 정도로 예상된다.

이번 총선부터는 사전투표용지 일련번호 표기형태를 2차원 바코드인 QR 코드에서 1차원 바코드인 막대형태로 변경하였으며, 사전투표 신분증 이미지의 보관기간도 연장돼 선거일 후 30일까지 보관된다.

교육을 총괄한 전북선관위 선거과장은 “안정적이고 완벽한 사전투표관리를 통해 선거인이 신뢰할 수 있는 사전투표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재훈 기자